



3면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북’ 성료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음 10월 4일) 제3385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첫 단추 꿰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입법 공청회 개최  
진술인들 “특자도 통해 공존할 수 있어”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서 참고자료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 교수는 “산업과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

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고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고 진

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 심사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과정이 남았다. 도는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수능 유의사항 안내... 수험생 예비소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전주중앙여고 어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해리면 한우농가  
럼피스킨 확진  
임상예찰 중 발견  
의심 소 '양성' 판정

## 도, 고액·상습체납자 최종 295명 명단 공개

지방세 264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명 등  
도·시군, 행안부 홈페이지 체납정보 동시 공개

15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가(38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 정밀 검사반이 고창 발생농가 반경 3km내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중 발견한 해리면 한우농가가 결국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15일까지 무장면 발생농가 반경 3km 46농가를 대상으로 축진 및 정밀 예찰해 조기색출에 나섰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소 사육농가에서는 항체 면역력이 강화되는 24일까지는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당부드린다”며, “임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15일 오전 9시부터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지는 지방세 분야 264명(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법인 3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인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올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 13만9505명 최종 확정

전북도, 총 3234억원  
행정절차 거쳐 신속 지급

전북도가 올해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3만9,505명을 최종 확정하고, 3,234억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금은 4만2,752명(전체의 31%)으로 513억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9만6,753명(전

체의 69%)으로 2,629억원(전체의 81%), 기타 92억원(전체의 3%)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각지대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 가능한 요건을 해소해,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

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들의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교육 미이수자 이수 독려(문자 및 전화 안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개인별 활동 인정 등을 통해 감액되는 농업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최종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